

연구논문

제국의 유령들

김석범의 ‘1945년 여름’과 해방의 시차

이혜진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한국근현대문학 전공

alusa@hanmail.net

- I.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연구의 난점들
 - II. 해방기의 시차성과 유예된 해방
 - III. 패전의 풍경과 해방의 허무주의
 - IV. 민족 vs. 타자: 해방기 재일조선인 2세의 감각
 - V. 망각과 기억의 시차가 소환한 해방의 유령들
-

I.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연구의 난점들

정의신(鄭義信, 1957~) 감독의 영화 〈용길이네 곱창집(원제: 焼肉ドラゴン)〉(2018)은 1969년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존재 조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1남 3녀와 함께 일본 사회의 차별을 감내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제주도 출신의 주인공 부부는 자식들만이라도 일본에 적응하며 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후 오사카 만국 박람회(1970.3.15~9.13) 개최를 계기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곱창집도 철거 위기에 처한다.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 용길이네 가족은 첫째 딸 부부가 북한으로, 둘째 딸 부부가 한국으로 향하고, 셋째 딸 부부만이 일본에 남는다. 이런 ‘분산된 운명’은 해방/패전 이후 재일조선인의 삶이 국적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잘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 영화의 결말이 문제적인 이유는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이 직면한 ‘조국 선택’의 현실이 곧 존재의 귀속에 따라 생존 가능성을 규정한 결정적 분기점이었음을 집약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이 선택한 남북한과 일본은 그 어느 쪽도 온전한 귀속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일조선인 사회를 또 다른 분단의 굴레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장면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생존의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난제의 기원을 환기한다.

이렇게 볼 때 ‘1945년 8월 15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쩌면 기쁨의 순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4468).

1 8월 15일이 공식적인 ‘해방의 날’로 규정된 것은 1949년 10월 1일 한국 정부가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면서부터였다. 일본 천황이 포츠담선언(1945.7.26)을 수락한 사실을 공표

만으로 기억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재일조선인들에게 해방은 또 다른 분단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미완의 해방’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방/패전 직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회복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조차 격화된 냉전 구도의 이념 대립 속에서 결코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었다. 남한은 미군정하의 반공주의와 이승만 정권의 국가주의가 결합하면서 귀환자들을 환영하기보다 잠재적 좌익 세력으로 의심하면서 사회적 통합에서 배제했다. 반면에 북한은 귀환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며 ‘조국 건설’의 주체로 호명했지만, 그 대가는 철저한 이데올로기적 충성과 체제에 대한 전면적 복종이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에게 남한과 북한은 끊임없이 정치적 입장을 시험받는 공간이었으며, 일본 역시 그들에게 안정된 거주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재일조선인들에게 해방은 환희라기보다 제국의 종식과 동시에 닥쳐온 새로운 단절의 경험이었다. 더욱이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던 그들에게 조국 한반도는 분단된 두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조선’이었기에 패전 후 일본이 강요한 국적 선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도상에서조차 사라진 ‘조선적(朝鮮籍)’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작가 김석범이 “남·북 어디에서도 태어나지 않은 채 지니게 되는 ‘조선’ 국적”이 통일을 지상 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한 “분단에 대한 반대 위치에 있다.”²라고 천명한 배경에는 이

한 것은 8월 15일이지만, 실제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날짜는 8월 14일이었다. 이후 8월 16일 전쟁중지명령이 내려지고, 9월 2일 미주리함에서 일본과 연합군의 항복조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는 9월 9일 일본군과 미군이 항복조인식을 치렀다. 한편 일본이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규정한 것은 196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전국전몰자추도식’을 개최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그 이전까지는 항복조인식이 거행되었던 9월 2일을 ‘종전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김석범(지), 이규슈(역), 「이회성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재일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실천문학》, 1999년 봄호, 320쪽.

런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형성한 국제 질서의 맥락이 각인된 것이었다.

요컨대 김석범의 ‘조선적’은 어느 한쪽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이념적 귀속을 거부한 결정으로,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재일조선인의 존재 조건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선택은 국적의 차원을 넘어 분단체제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될 때 수반되는 정치적·이념적 규정을 거부하려는 행위인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경계적 위치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김석범에게 ‘조선적’은 오직 남북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귀속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신념의 표상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방 초기부터 이미 분단과 귀속 문제가 동시에 표면화되었고, 이런 조건에서 재일조선인의 운명이 결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즉, 재일조선인이 겪어 온 정치적·법적 불안정성과 정체성의 모순은 해방의 순간부터 구조화되었으며, 그 미해결 과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상사적 과제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상사적 과제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법적 불안정성과 정체성의 모순을 단지 한·일 관계라는 민족적 맥락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이 동아시아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국제 질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말한다. 재일조선인의 ‘귀속되지 못한 국적’과 분열된 정체성은 바로 이 냉전체제의 역학 속에서 구성된 것이며, 이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요구하는 소속의 기준이 동아시아 냉전 질서 속에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족사적 관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형성한 정치·외교적 질서와 그 안에서 귀속과 배제를 재편해 온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요청한다.

해방/패전 직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인’에서 ‘외국인’으로 이행하는 단

절을 겪었고, 곧 ‘민단’과 ‘총련’으로 분열되어 상이한 정치적 선택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정치적 지형과 사회적 연대에 깊은 균열을 초래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연합군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의 점령통치 전략과 일본 정부의 공모에 따른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45~1948년 초기 점령기의 재일조선인 사회는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다.³ 그러나 1948년을 전후로 냉전체제가 본격화되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점령 정책에 강하게 투영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공 치안을 중시한 GHQ의 전략은 상호 호응하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상보적으로 구성했다. 이런 정세 변화에 비추어 볼 때 GHQ의 대조선인 정책은 일본 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한 단기적 행정 조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형성과 맞물려 전략적으로 구성된 대응이었다. 즉,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통제와 분할 논리는 곧 점령 행정의 필요와 냉전 이데올로기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 것이며, 이는 재일조선인의 귀속과 정체성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방의 시차(disjunctur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의 시차란 해방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음을 뜻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해방이 환희와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억으로 남았다면, 재일조선인들에게 해방은 여전히 제국의 유령적 잔존 속에서 타자화와 배제, 귀속의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하는 지체된 시간이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특히 김석범의 문학은 이 해방의 시차를

3 金太基, 「『戰後』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年~1952年」, 一橋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博士論文(1996), 1~4쪽 참조.

포착하면서 해방이라는 기쁨의 서사에 은폐된 분열의 기억을 소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재일조선인 연구의 난점 중의 하나는 해방이 이들에게 자유와 귀환의 문을 열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순을 낳은 결정적 계기였다는 데 있다. 해방과 패전을 동시에 겪었던 재일조선인들의 처지는 한편으로는 더 이상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굴욕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품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패전 일본의 사회적 혼란상이 초래한 불안과 상실을 심화시켰다. 특히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다양한 선택은 귀환과 체류, 민족적 동일시와 일본 사회 적응이라는 상반된 결정 속에서 실존적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김석범의 장편소설 『1945년 여름(1945年夏)』(1971~1973, 1974년 단행본 간행)⁴은 재일조선인의 처지를 전경화하면서 해방기에 내재된 자기기만과 분열, 그리고 현재까지 유예된 미해결의 과제들을 집요하게 포착한다.⁵ 이는 패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존재 조건을 사상사적 과제로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문학과는 다른 궤적에서 해방의 의미를 사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

4 1974년 築摩書房에서 간행된 김석범의 『1945년 여름』은 「長靴」(《世界》, 1971. 4), 「故郷」(《人間として》, 1971. 12), 「彷徨」(《人間として》, 1972. 9), 「出發」(《文藝展望》, 1973. 7) 등 네 편의 단편소설을 모아 장편소설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계자, 「옮긴이의 글」, 『1945년 여름』(서울: 보고사, 2017), 365쪽.

5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계자는 김석범이 '4.3 작가'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온 연구 경향을 지적하면서 재일 디아스포라 논의에서 은폐된 '일본'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8.15'의 환기를 제기했다. 고은경은 재일조선인들의 이념과 동시대 상황의 관련성을 통해 작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했으며, 조수일은 주인공 김태조의 주체적 이동에서 드러난 유동적 자아의 의미를 고찰했다. 임성택은 전후 재일조선인들의 가치관 변화를 탐구했으며, 전성규는 이 작품이 자기 문제와 직면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김계자, 「환기와 소거, 그리고 일본어문학」, 『한일일본학』 25(2014), 167쪽; 고은경, 「이념 구현과 정체성 탐구의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 78(2019), 76쪽; 조수일, 「재일조선인의 주체적 이동과 '8.15'의 자기서사」, 『한일민족문제연구』 38(2020), 124쪽; 임성택, 「김석범 문학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 『일본어문학』 91(2021); 전성규, 「거부당하는 주체로서 자기인식의 문제」, 『국제어문학』 95(2022), 380~381쪽.

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해방/패전 직후 재일조선인 사회가 겪어야 했던 분열의 내재적 기원을 망각하려는 일본과 조선인들의 태도에서 여전히 현재를 배회하는 ‘제국의 유령들’을 폭로한 점은 전후의 ‘기억 레짐’을 파열하고 해방의 의미를 재규정하도록 요구한다. 이 글은 이런 유령적 존재성의 기원에 주목하면서 해방의 시차를 통해 제국 해체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기억의 정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해방기의 시차성과 유예된 해방

조선의 해방은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도래했지만, 그것이 모든 조선인들에게 즉각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제국의 종말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해방을 실감할 수 없는 경계인으로 살아가야 했다. 이 배경에 포츠담 선언(1945.7.26)과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의 초기 대일점령정책에서 재일조선인을 ‘해방 민족’으로 분류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은 제국 신민-해방 민족-외국인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시각각 처우가 달라졌다. 먼저 1945년 11월 1일 GHQ의 지령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귀관(貴官)은 군사상 안전이 허락하는 한 대만계 중국인과 조선인을 해방민족(liberated peoples)으로 처우한다. 그들은 이 지령에 사용된 ‘일본인’이라는 용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일본의 신민(Japanese subjects)이므로, 필요한 경우 귀관은 그들을 적국인(enemy nationals)으로 처우해도 좋다. 그들이 만약

희망한다면 귀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송환할 수 있다.⁶

GHQ는 재일조선인을 ‘일본 신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기본 전제로 삼고, 여기에 ‘해방 민족’으로서의 처우 조건을 부가했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은 형식적으로는 ‘해방 민족’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본 신민’이었으며, 상황에 따라 ‘적국인’으로도 취급될 수 있었다. ‘해방 민족’으로 대우한다는 조건은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는 대일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었는데, 이런 초기의 합의는 이후 재일조선인의 처우가 왜 불완전하게 고착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요컨대 GHQ의 정책은 처음부터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일본 신민’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급변해가는 냉전체제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방 민족’이라는 명칭을 상징적으로 덧붙인 것이었다.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이 전후 일본에 대한 처리를 합의한 문서이자 조선의 해방을 최종적으로 명시한 국제적 선언이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당시 국제 질서의 맥락에서 조선의 독립을 조망하게 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서라 할 수 있다.⁷ 당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내용은 즉시 한국에도 전해졌는데, 다음 기사는 당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와 GHQ의 정책 방향, 그리고 한·일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일본 거주 조선인의 지위에 관하여 여좌히 발표

6 外務省政務局特別資料課(編),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1945~1950』(東京: 湖北社, 1978), 10쪽.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7 신중훈, 「1945년 여름, 포츠담」,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38(2016), 138쪽.

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정책은 전 점령구역을 통하야 조선인에 대하여서는 해방국민으로서의 대우를 수여하는 동시에 조선인의 복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도 내에 있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례를 들면 조선인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서는 점령군 당국이 그 판결 내용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취하야 공정히 전 제삼국인에 수여되는 보호 재판하도록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은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특권은 수여되지 안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치외법권 특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있어서 재일본 조선인의 지위에 관하야 유포되고 있는 오보를 변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 귀국을 거부하는 조선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 국적 하에 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이고 다만 그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일본 일반 시민과 같이 일본 법률을 전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뿐이다. 현재 재일본 조선인 총수는 약 60만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7만 5천 명이 12월 15일까지 조선으로 송환될 것이며 잔여는 계속 일본에 잔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선에 송환된 조선은 97만 9천 명인데 그 중에는 일단 송환된 후 다시 일본으로 말하야야 거듭 송환된 1만 4천 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대변인의 언명은 분명히 조선, 일본 양측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또 일본 내 거주 소수민족 문제는 결국 관계 국가 조선, 일본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⁸

이 기사는 GHQ가 ‘해방 국민’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재일조선인들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려 한 것이었지만, 그것의 법적 함의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치외법권을 배제한 채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재일조선인은 일본 시민과 동일한 처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 국민’이라는 수사가 법적 보장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음

8 「재일조선인은 해방국민 대우: 연합군사령부 대변인 답」, 《조선일보》, 1946년 11월 29일.

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HQ는 ‘일본 국적 강제설’을 부인하면서 양측의 ‘오해 해소’와 ‘중재’를 강조했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표명이라기보다 재일조선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일본과 조선 양자 간 사안으로 전가하려는 전략에 가까웠다. 결국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GHQ와 일본 정부의 이해가 맞물린 가운데 무국적에 가까운 불안정 속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47년을 기점으로 GHQ의 대일점령정책에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비군사화(평화주의)’와 ‘민주화(민주주의)’라는 초기 개혁 정책이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1947년경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냉전 구도가 대일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환은 냉전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과 일본의 국가적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변곡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47년은 미·소 관계가 협력에서 대결로 전환된 시점으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공식화하자 소련이 동유럽의 공산화와 코민포름 결성으로 대응하면서 체제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다. 이런 국제 정세의 격화는 일본을 ‘아시아 반공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 구상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 대일점령정책은 민주화·비군사화 중심에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공체제 구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이런 전환 속에서 GHQ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점령 질서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일본에 만연한 조선인 차별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음이 확인된다. 재일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일본인’에서 ‘외국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송환·귀국 문제를 둘러싼 국적 지위가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1947년은 남한 단독 선거(1948)와 북한 정권 수립을 앞두고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의 좌우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

또한 당시 재일조선인은 암시장 거래와 범죄, 세금 회피 등 각종 사회병리

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이 일부 사례를 과장·확대 보도하면서 범죄 이미지가 덧씌워졌고, 실제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그런 편견은 반복적인 신문 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착되고 있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일부 재일조선인들의 위법을 전체에 일반화해 전가했고, GHQ도 냉전기 전략 수정 속에서 반조선인 보도를 승인·방조했다. 이른바 역코스⁹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GHQ의 정책 전환은 일본의 전후 재건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긴밀히 맞물리며 일본 정부와 점령 당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교차한 결과였다. GHQ는 일본을 반공 방벽으로 삼기 위해 치안 권한의 회복을 용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재건의 기틀을 마련해 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전략적 필요가 조율하면서 형성된 협력 구도는 결국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체결, 1952.4.28.발효)⁹으로 귀결되었다. 강화조약은 일본의 주권 회복 선언임과 동시에 점령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도 결정되었다. 즉, 조약 체결과 함께 재일조선인은 공식적으로 일

9 이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결과로 체결되었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회의 당시 일본은 국제법상 여전히 연합국과 전쟁 상태에 있었고, 연합국이 점령 통치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 일본은 전쟁으로 단절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의 형식적인 주권 회복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냉전질서에 일본을 편입시키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문제와 동아시아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용어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이리에 아키라가 『일본의 외교』(1966)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그는 이를 “일본의 주권 회복과 일정 수준의 재군비 허용, 그리고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축으로 삼아, 남한·대만·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소련·중국·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로 정의했다. 오구마 에이지(저), 한철호(역), 『일본이라는 나라』(서울: 책과함께, 2009), 82쪽; 이리에 아키라(저), 이성환(역), 『일본의 외교』(서울: 푸른미디어, 2002), 199쪽.

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로써 해방/패전 직후 지속되어 온 법적 불안정성은 하나의 제도적 결론을 맞이한 셈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재일조선인의 해방기’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그들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기까지의 시기를 포함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은 더 이상 제국의 신민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못한 채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안정한 존재로 머물러야 했으며, 이런 상태는 그들의 권리와 정체성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1952년 강화조약 발효는 이런 이중적 경계 상태를 제도적으로 마감 지은 정치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재일조선인의 해방은 하나의 역사적 경계로 자리 매김될 수 있다. 요컨대 재일조선인의 해방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까지의 시기를 포괄하는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설정되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재일조선인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의 부산물”¹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냉전 동아시아 반공주의의 산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III. 패전의 풍경과 해방의 허무주의

해방/패전 이후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잔류했거나 귀환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해방은 내부 붕괴와 존재적 위기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작가 김석범이 해방되지 못한 자들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다룬 것은 자신이 체험한

10 김석범(강연), 사이키 가쓰히로(역), 「문학적 상상력과 보편성」, 『오늘의 문예비평』 124(2022), 84쪽.

역사를 문학과 정치의 접면에서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김석범의 문학에서 ‘해방’과 ‘조국’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키워드 대신 ‘인간’, ‘기억’, ‘분열’, ‘실패’와 같은 비정형적 주제를 전경화함으로써 국민국가 담론을 해체하는 데 주력한다. 이 점은 김석범 문학에 접근할 때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런 작가의 태도는 그의 문학을 민족 서사의 재구성이나 분단 서사로 환원하는 독해 방식에서 탈각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김석범의 『1945년 여름』은 “자신 안에 있는 ‘왜인’”을 의식하면서 “반향할 수 없는 주박의 지배를 받아들”¹¹이는 재일조선인 2세 청년 김태조(光山, 미쓰야마)를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작가의 자기혐오와 허무주의를 투사하는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 주체의 시선으로 재일조선인의 현실을 응시하려는 문학적 지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은 패전 직후 오사카 지역에 잔류한 조선인들의 삶을 전경화하면서 해방 이후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변모 사이에 작동하는 자기기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² 실제로 재일조선인들 중에는 제국의 신민으로 동화되어 순응적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답게 살고자 했던 이들도 존재했다. 반면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고, 또 고향에 남겨둔 가족을 찾아 귀환을 희망했지만 해방 이후 한반도의 격화된 이념 대립에 가로막혀 일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아가 일부는 귀국을 실행에 옮겼지만 제주4.3사건과 같은 이념적 충돌을 겪은 끝에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등 귀환과 재이주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런 다층적 경험은 재일조선인들에게 해방이 결코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대변하

11 김석범(저), 김계자(역), 『1945년 여름』(서울: 보고사, 2017), 217쪽.

12 이해진, 「1945년 해방과 패전의 서사: 김남천과 김석범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9(2018), 317쪽.

며, 오히려 공동체 내부의 균열과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패전 직후 재일조선인 사회는 급속히 정체성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 “재일조선인들도 독립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생할 길을 향해”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전환하기 시작”¹³한 것이다. 하지만 어제까지 일본에 협력했던 이들이 돌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애국자로 탈바꿈하는 모습은 재빨리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옷을 갈아입는 처신으로 나타났다. 이때 김태조는 자신이 ‘왜놈’인지 ‘조선인’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내적 제약과 마주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재빠른 자기변신에 강한 혐오를 느낀다.

분명 이곳에는 통렬한 자기비판이나 상호비판은 없었다. [...] 이제는 일본인이 아니니까 하는 등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 혹은 ‘일본인이 아니니까’라는 당연한 말이 김태조에게는 속이 뻥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로 들려서 참고 듣고 있기 힘들었다. 적어도 조선의 독립을 지향해온 자신조차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상처의 통증이 너무 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들의 말에서 ‘8.15’가 당연 갖고 있을 터인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충격이 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태조는 이곳에서 어른들의 교활한 지혜조차 간취했다. 어제까지 일은 코를 풀어 던져버리듯 암묵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공기에 혐오감이 들었다.¹⁴

패전 당시 17세의 청년이었던 시인 김시종이 ‘황국 소년’이었던 자신에게 일본의 패전은 엄청난 충격이었기에 며칠 밤을 울며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

13 김석범, 앞의 책(2017), 262~263쪽.

14 위의 책, 271쪽

비탄에 잠겼었다는 회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¹⁵ 패전 직후 재일조선인들의 생존을 위한 급격한 전환은 일견 자연스러운 대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의 페르소나인 김태조는 조국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한 채 극심한 자기혐오 속에서 방황한다.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해방의 기쁨’이라는 수사가 개입할 수 없는 정서적·사상적 시차가 존재했으며, 이는 해방의 경험과 감정이 결코 동질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분명 조국 해방은 그의 전 존재를 걸 닦아치기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이를 위해 조선으로 갔던 것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건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말인가. 김태조는 스스로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곱씹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그가 이 말을 자신의 입에 담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너무 속이 뻘뻘 들여다보이는 말이 될 것이다. 김태조는 현재 이 말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의 그와는 인연이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아니, 멀리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의 해방조차 그에게 굴절된 빛을 던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 선생님이 전에 냉소적으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해준 8.15의 빛이 부끄러워 더욱 눈이 부셨다. 조국의 독립이 매우 소중한 기쁨이기

15 김시중(저), 윤여일(역), 『재일의 틈새에서』(서울: 돌베개, 2017), 169쪽. 1929년 함경남도 원산 출생인 김시중은 김석범과 함께 ‘재일조선인 2세’에 해당한다. 윤건차에 따르면 ‘재일 1세대’는 유소년기를 조선에서 보내고 일본 패전 이전에 도일한 이들로, 조선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스스로를 황국 신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반면 ‘재일 2세대’는 천황제적 동화를 거쳐 ‘황국 소년’으로 성장했으나 해방을 계기로 자신을 재구성해 간 세대이며, ‘재일 3세대’는 조선을 숨기며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변신을 추구하며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 세대로 구분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시중 역시 한때 ‘열성적인 황국 소년’으로서 언어와 사고 면에서 일본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적응해 있었으며, 이는 4세에 도달한 역사학자 강덕상(1931년생)이나 사할린에서 성장한 작가 이회성(1935년생)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윤건차(저), 하종문·이애숙(역), 『일본-그 국가·민족·국민』(서울: 일월서각, 1997), 253쪽; 미즈노 나오키·문경수(저), 한승동(역), 『재일조선인』(서울: 삼천리, 2016), 105쪽.

때문에 더욱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자기혐오의 나락으로 김태조는 떨어졌다.¹⁶

일찍이 김석범은 소설이란 주어진 현실과 대치하면서 전체를 꿰뚫어보는 시각을 요구하는 장르이기에 그 속성상 저항 문학·레지스탕스 문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어 왔다. 특히 20세기를 혁명과 문학의 시대, 곧 로맨티시즘과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의 장으로 파악했던 그는 자신의 문학 역시 그런 흐름에 조용한다고 자주 피력했다. 더욱이 한반도의 해방이 미완에 그친 근본 원인은 친일 세력 청산의 부재와 그 세력이 곧바로 친미로 전환되면서 전후의 지배세력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친일파에 대한 강한 비판은¹⁷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테마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태조의 허무주의는 집합적 실천이 현 조건 속에서 실효성을 잃어버렸다는 자기 인식 위에서 보다 급진적인 비판 의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때 김석범의 문학은 재일조선인이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말하려는 윤리’이자 ‘국가를 넘어선 증언의 글쓰기’로 구체화된다. 이런 문학적 실천은 기억의 윤리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근대사의 내적 한계를 드러내는 반성적 장치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들에게 조국의 해방은 곧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이자 식민 잔재의 재배치 과정이었으며, 이런 전후 인식은 ‘1945년 해방=해결’이라는 한국 중심의 서사를 근본적으로 문제화하기 때문이다. 훗날 김석범의 창작 행위가 허무주의 극복의 과정¹⁸으로 파악된 것은 바로 이런 비판적 사유의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방/패전 서사는 흔히 ‘재일조선인의 활기’와 ‘일본인의 좌

16 김석범, 앞의 책(2017), 264쪽.

17 이 주제에 대해서는 권성우, 「김석범의 火山島에 나타난 ‘친일’ 비판의 의미」, 『국제한인문학』 19(2017) 참조.

18 나카무라 일성(지), 정기문(역),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서울: 보고사, 2020), 276쪽.

절’이라는 도식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패전 직후 치안 당국의 동향조사(1945.9.4)에 따르면, 해방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일본에 잔류하고자 한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니가타현의 한 조선인은 독립하더라도 곧 소련·미국·중국의 속국 신세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이대로 내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고, 집단징용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이들(당시 약 30만 명)과 관청 근무자 등 일본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일부 조선인들도 귀국을 주저했다. 실제로 1946년 당시 10만 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조선인이 약 1,000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해방의 경험이 단일한 서사로 환원될 수 없음을 잘 보여 준다.¹⁹

한편 김태조의 허무주의는 그가 조선 땅을 밟았다고 해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나마 “내 조국의 수도, 경성”²⁰에 발붙였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끼지만, 곧 조선인 공동체 속에서 마주한 단절 앞에서 그 감정은 급격히 무너진다. “조선어를 알아듣지 못하는”²¹ 처지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한계를 각인시키며 조선 역시 그를 “간단히 허용해주지 않”²²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일본을 거부하고 찾아온 조국 조선에서도 그는 뿌리 없이 떠 있는 풀과 같았다.”²³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김태조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온다. 그가 자기 내부의 ‘왜인’을 극복하고 조선인으로 거듭난 계기가 천황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천황 숭배의 권위가 그의 정체성을 옥죄며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김태조는 변소

19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앞의 책(2016), 103~104쪽.

20 김석범, 앞의 책(2017), 140쪽.

21 위의 책, 141쪽.

22 위의 책, 142쪽.

23 위의 책, 154쪽.

에 버려진 ‘천황과 황후의 사진’을 모욕하는 행위를 통해 그 힘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자기 인식의 출발점에 선다.

김태조는 재래식 변소에 앉아 있었다. [...] 문득 눈에 들어온 헌신문의 일면 기사에 천황과 황후의 사진이 큼직하게 실려 있는 것이 보였다. [...]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황국신민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어진영’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교육받았다. 변소 속에 버려진 신문지라고는 해도 그 사진은 아직 보는 사람을 위협해오는 일종의 힘을 갖고 있었다. [...] 그러나 생각해보면 단 한 장의 헌신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왜 별별 떨며 보고 있는가? 어째서 이 변소 속의 헌신문에 구속되는 것일까? 그는 문득 뭔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 김태조는 다시 한 번 변소 문을 안에서 단단히 잠그고 마치 자위를 도모할 때처럼 밀실 상태 속에 자신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황 황후’의 사진 부분을 찢은 헌 신문을 에잇 하고 자신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그 순간 몸이 두둥실 가볍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 동시에 김태조는 뭔가 자신 속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눈앞에서 뛰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 그렇다. 나는 그때부터 달라졌다. 드디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그때의 변소 안 헌신문이 갖다 준 것이다. 나라는 인간은 그때 변소 안에서 결정되었다.²⁴

이 장면은 김태조가 황국신민 의식을 상징적으로 거부하며 새로운 주체성의 문턱에 들어선 극적인 순간으로 읽힌다. 즉, 민족 해방이라는 정치 세계의 전환이 곧바로 의식의 변혁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이 장면은 황민화 교육 속에서 성장한 재일조선인 2세가 가졌던 정체성의 전형을 잘 묘사해 준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조선인들

24 위의 책, 165쪽

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황과 긴밀히 얽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 천황이 지배의 정점에 위치한 이상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항일투쟁을 지속한 이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조선인은 천황제 권력에 가담하거나 그 속에서 무력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위치에 서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패전/해방이라는 역사적 전환을 두고 전향·친일·민족 반역과 같은 부정적 궤적을 새겨 왔던 것이다.²⁵

변소라는 가장 남루한 공간에서 천황의 이미지를 모욕하는 행위는 김태조를 옹죄고 있었던 식민 권력의 심리적 잔재를 스스로 끊어 내는 급진적 결단이었다. 특히 “나는 그때부터 달라졌다”는 선언은 그가 더 이상 ‘왜인’의 자아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 자기 탄생의 순간’을 집약한다. 이는 권위와 권력 지향으로 이어지는 내면 구조, 곧 자기 안에 각인된 일본 제국주의를 도려내고 인간으로서의 재생을 도모하는 불가피한 행위였다.²⁶

IV. 민족 vs. 타자: 해방기 재일조선인 2세의 감각

재일조선인들은 해방을 다양한 형태로 맞이했다. 물론 대다수는 조국의 해방을 기뻐했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기록은 많지 않다.²⁷ 이에 대해 『1945년 여름』은 ‘해방’을 둘러싸고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증언적 가치

25 이 점에 대해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래 임종국·리영희·임현영·길진현 등이 친일파 비판의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오임준·김시중·김석범·박경식 등이 ‘내면적 천황제’의 고발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윤건차, 앞의 책 (1997), 279~280쪽.

26 위의 책, 280쪽.

27 위의 책, 265쪽.

를 지닌다. 첫째는 그동안 주목되지 못했던 ‘재일조선인 협화회(協和會)’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재일조선인 2세’의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20~1930년대에 출생한 세대의 특성이 작가의 관점에 투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 종결을 맞이한 재일조선인들이” “독립한 민족의 일원으로 소생할 길을 향해 움직이기” 위해 새로운 “조직구성에 착수하고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전환하기 시작”²⁸한 패전 직후의 상황이 작품 속에서 협화회의 인물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답게 행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으며 라디오 가게를 운영해 나름의 성공을 거둔 우메바라 조타로(梅原丈太郎)는 협화회의 지도원이다. 그는 “일본인 상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인”이지만 동포 앞에서는 꺾고 일본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중적 태도²⁹를 보이는 인물이다.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 속에서 병어리 행세로 살아남은 그는 “인간답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한 일본인”³⁰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모범적인 일본인”³¹으로 살았다. 이에 비해 도요카와 금속제작소의 사장 이기선은 협화회의 고문을 맡고 있지만 황민화운동이나 내선일체 사업에는 “적당히 순응”³²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장차 일본제국의 장교를 꿈꾸며 지원병에 자원한 협화회 청년반장 가네모토 에이이치(金本英一)(본명 김영일)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도나리구미(隣組)의 방공반장인 다카야마(高山)(고 서방)는

28 김석범, 앞의 책(2017), 262~263쪽.

29 위의 책, 87쪽.

30 위의 책, 48쪽.

31 위의 책, 111쪽.

32 위의 책, 21쪽.

도나리구미 활동에 열성적이어서 일본인들의 감탄을 사면서도 협화회 활동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늘 저자세이지만 일본인 앞에서는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는”³³ 인물이다. 또한 구제고를 졸업한 후 K대 예과에서 공부하다 “특별간부 후보생 출신의 조선인 육군소위”가 된 도요카와 나리히로 [豊川成弘](이성식)는 “학생복을 벗어던지고 군복을 입은 순간 비로소 자신이 일본인이 된 실감이 들어 눈물을 흘”³⁴렸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인물이다.

협화회는 재일조선인의 황국신민화 작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1924년 관동대지진의 사후 조치를 위해 오사카부[大阪府]에 설립된 내선협화회에 그 기원을 두었다.³⁵ 1936년에는 조선인 보호·구제뿐 아니라 국민정신 함양, 생활 개선, 경찰 보호 강화, 범죄 방지, 위생시설 확충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39년 ‘재단법인 중앙협화회’의 설립과 함께 재단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³⁶

협화회가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통치하는 대신 민간조직의 형식을 빌려 재일조선인을 관리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즉, 협화회는 자율적 민간단체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준 국가기구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동화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주관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경찰력만으로는 협화회를 주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국은 조선인 유력자를 통해 조직 활동을 확대했는데, “모범적인 일본인” 우메바라 조타로와 제국 장교를 꿈꾸는 가네모토 에이이치, 조선인 출신의 육군소위 도요카와 나리히로 등이 협화회의 중심으로 자리했던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

33 위의 책, 89쪽.

34 위의 책, 103쪽.

35 정근식·신주백(엮음),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파주: 선인, 2006), 246쪽.

36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앞의 책(2016), 78쪽.

다. 따라서 작가 김석범의 시선이 재일조선인 사회의 균열을 확대한 협화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해방 후 친일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지녔던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시기 “협화회 지도원”으로서 “반도’ 동포에 대한 ‘내선일체’의 교화를 목적으로 일’했던 우메바라는 동포 사회와 거리를 두었다. 그런 이유로 주변의 조선인들이 “그를 조선인으로 생각하지 않”³⁷으면서 상대를 꺼려했다. 하지만 패전 직후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일어설 조선인 조직을 만들자는” 조선인 회합에 우메바라가 자리했을 때³⁸ “그가 참석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³⁹

8월 14일까지는 황국신민화의 복음을 말하고 다니던 우메바라였다. 그리고 보면 우메바라의 이와 같은 발언 자체가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복권이라는 조건을 포석으로 하고 있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낚새도 느껴졌다.

누구의 눈에도 우메바라가 이곳에 있는 것이 분명 기이하게 느껴져야 할 터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분명 이곳에는 통렬한 자기비판이나 상호비판은 없었다. 이는 서로가 다소 시국에 순응해 일본인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협화회 시절의 인간관계가 그 대로 8.15 이후에도 넘어온 것 같아 서로 찌르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모인 것은 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일본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해 새로운 독립민족의 일원이 되어 앞으로 조국 건설을 위해 준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주장은 나름의 진실성이 있었다.

협화회 시절 ‘모범적 일본인’을 자처했던 우메바라가 해방 후 돌연 ‘조선인’

37 김석범, 앞의 책(2017), 88쪽.

38 위의 책, 268쪽

39 위의 책, 270쪽.

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며 김태조는 역겨움을 느낀다. 이런 무책임함을 묵인하는 조선인 공동체의 “관대한 불결함” 역시 해방을 통한 자기변혁의 외피를 입은 위선으로 비쳤다. 그러나 김태조 역시 “조선에서 지내는 생활을 따라갈 수 없었고, 또 생활의 근거지인 오사카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조선인 사회에도 친숙해지지 못”⁴⁰하는 이중의 소외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을 단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무책임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며, 그런 긴장 속에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자각한다.

이것은 그의 오만이다. 그는 거북이 등껍질을 뒤집어쓰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우위를 지키려고 했다. 이것이 일그러진 주관적인 태도라는 것을 김태조 자신이 모를 리 없지만, 돌연 몸이 그리고 손과 입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니 하는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조국에 그대로 머물러 남아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손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적어도 만세를 외치는 더러움 없는 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물론 조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의 자신을 갖다 놓으면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 그래도 김태조는 생리적인 통증 같은 것을 내면에 갖고 있어서 상처입지 않은 이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싶었다. 그 역겨운 외침이, 아이도 지를 수 있는 무책임한 외침이 지금 귀에 되살아와 건딜 수 없었다. 오히려 조국의 대지에 타고르는 신성한 외침을 없애 버릴 것만 같아 괴로웠다.”

이처럼 김태조의 내면에는 모순과 자기혐오가 교차하는 갈등이 자리해 있

40 위의 책, 273쪽

41 위의 책, 274~275쪽.

는데, 이는 재일조선인 2세 작가의 감각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6일 해방의 기쁨을 나누며 술판을 벌인 조선인 마을에서 태극기를 처음 보았다는 강덕상의 회고에서처럼, 2세대에게 해방은 낯선 기호를 통해 매개된 사건으로 다가왔다. 즉, 해방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느닷없이 출현한 ‘타자의 상징’으로 경험되었으며, 이는 곧 동일성의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균열을 자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자 자신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게 만드는 계기였다. 김태조에게 천황의 사진을 모욕하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 드러난 재일 2세대의 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재일 2세대 평론가 서경식 역시 ‘민족의 자격’을 기준으로 삼아 접근할 때 재일조선인은 언어·지역·문화의 측면에서 모두 결핍된 존재라는 점에서 ‘무자격성’ 또는 ‘결격’이 바로 ‘재일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는데,⁴² 이런 정신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 2세대 작가 김석범은 조국의 해방이 정체성을 구원했다기보다 오히려 내면의 균열과 자기혐오를 심화하는 순간으로 포착했다.

즉, ‘민족의 자격’을 갖지 못한 김태조의 내적 분열은 표면상 일본-조선의 민족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와 타자의 관계성’이라는 차원으로 이행한다. ‘일본이 좋으면서도 싫고, 조선(재일)은 싫으면서도 좋다. 조선인이지만 조선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다.’라는 재일 2세대의 감각은 ‘자기’란 ‘타자’를 전제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성을 둘러싼 재일 2세대의 내적 갈등은 민족적 구분을 넘어 ‘자기와 타자의 관계성 문제’로 독해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낸다.⁴³ 더욱이 이들에게 ‘타자’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된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타자

42 윤건차(저), 이지원(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서울: 문화과학사, 2003), 321쪽.

43 위의 책, 322~323쪽.

성'과 조우·격투하는 곤란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⁴⁴

이런 맥락에서 김태조의 혐오와 공허,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는 재일조선인 2세대의 실존 조건을 드러내는 동시에 김석범 문학의 핵심 감각을 구현한다. 즉, 이것은 민족 해방이라는 집단서사로 포착할 수 없는 개인의 분열된 내면과 공동체의 위선을 직시하는 비판적 시선이다. 이런 묘사는 1세대의 감각과 구별되는, 2세대가 체감한 복합적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항상 “조선어만 사용하고 조선의 민족의상”만 입고 “열심히 일하며 타향의 풍상에 기죽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 온 ‘조선 어머니들’⁴⁵이나 협화회를 피해 다니며 민족 감정을 지켜온 ‘다카야마 아저씨’는 재일조선인 1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방 직후 다카야마가 스스로 만든 방공호를 허물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장면은 민족 의식과 생활세계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었던 재일 1세대의 성정을 보여 준다. “여러분, 36년 긴 세월 동안 우리 조선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훌륭한 나라를 세워…”⁴⁶라는 그의 발언에서 김태조의 혐오가 감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1세대를 향한 그의 감정이 따뜻한 정서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거니와, 다카야마가 “자전거로 도살장을 다니며 소와 돼지의 내장 같은 소위 호르몬 종류를 팔고 있는”⁴⁷ 평범한 중년 남자로 묘사된 것도 그가 재일 1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의 형상화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일본인이라는 절대적 가치관”⁴⁸을 지녔던 육군 소위 도요카와가

44 위의 책, 328쪽.

45 김석범, 앞의 책(2017), 83쪽.

46 위의 책, 272쪽.

47 위의 책, 272쪽.

48 위의 책, 323쪽.

해방 후 조선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배경에 그의 부친이 자리해 있었다는 사실은 1세대와 2세대가 정체성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인데, 전쟁 중에는 그렇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자 갑자기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돼 버렸지 뭐야. 그전까지는 조선인이 일본인을 받드는 것은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예전의 중국을 바라, 한민족은 청조 밑에서 삼백 년이나 받들고 살지 않았느냐. 몽고가 중국을 지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아버지였어. 그런데 일본이 패하자 바로 아버지는 정말로 흥분한 것 같았어. 조선이 독립할 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빨랐다고, 뜻밖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 그래도 독립이 된 이상은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생각지 못한 민족적인 기쁨이라는 거지. 나는 아버지의 그런 소박함에 감동을 받았어. 말하자면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의 논리대로 시대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민족적 감정이 강한 구시대의 노인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나는 가르침을 받았어.⁴⁹

전쟁 중에는 현실 논리에 따라 일본제국에 순응하던 도쿄카와의 아버지가 패전 직후 돌연 민족주의자로 변모한 모습은 재일 1세대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들은 역사적 격변 앞에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민족으로 회귀할 수 있는 세대였다. 이에 비해 2세대는 제국의 교육 속에서 주체가 형성된 존재로서, 해방을 민족성의 회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적 균열에 직면했다. 따라서 1세대의 급격한 민족적 전환이 2세대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감

49 위의 책, 325~326쪽.

정적 복귀로 비쳤으며, 이런 대비는 해방을 둘러싼 감각이 세대별로 상이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요컨대 김태조에게 해방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무력감이나 조선인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⁵⁰ “조선인이라는 것을 숨겼던 과거 자신의 얼굴”⁵¹과 마주하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김태조는 조국의 해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한다. 해방 정국의 조선과 연합군이 점령한 일본 모두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조선에 도착한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해방의 실상이 관념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소설은 그가 마침내 혁명가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V. 망각과 기억의 시차가 소환한 해방의 유령들

김석범의 『1945년 여름』은 해방/패전 직후 재일조선인의 경험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조국의 해방이 곧 민족적 귀환이나 동일성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배경을 드러냈다. 일본에서 태어나 제국의 규율에 의해 사회화된 재일 2세에게 해방은 내적 균열과 자기혐오를 심화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해방은 민족사의 집단 기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열과 모순의 체험으로 남게 되었으며, 김석범은 이를 통해 조국의 해방을 현재로 회수할 수 없는 기억의 균열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그가 ‘조선적’을 고수하게 된 사상적 토대로 이어진다. 조선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귀속되지 않은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려는 선택이자 국민국가의 서사로 회수할 수 없는

50 위의 책, 83쪽.

51 위의 책, 105쪽.

해방의 균열을 현재적 문제로 남겨 두려는 적극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45년 여름』은 해방/패전을 전후한 재일조선인 공동체의 풍경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대일협력의 모순과 분열된 자기 정체성을 둘러싼 내적 갈등을 묘사한 작품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현재까지 조선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를 직시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다. 해방은 식민지 지배하의 한반도가 해방된 환희로 기억되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에게는 균열과 배제를 각인시키는 경험이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재일조선인의 기억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통상적 문제의식조차 배반하면서 해방의 의미를 재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근래에 형성된 개념이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밝혔던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의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 이는 해방을 둘러싼 관념이 공동체의 귀환으로 이해되어 온 기존의 상식을 전복하면서 그런 종류의 기억과 망각이 특정한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장치였음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석범은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고통을 문학적 언어로 끌어올리면서 ‘재일 문제’로 축소되어 다루어진 경험을 ‘분단체제와 식민주의의 문제’로 확장시킨 작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오늘날까지 조선적을 고수하는 태도는 단순한 국적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귀속 논리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비판적 선택이자 해방과 패전의 시차, 분단과 냉전의 균열을 현재적 과제로 남겨 두려는 사유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조선적’은 곧 ‘완결된 해방’의 환상에 맞선 실천이라는 김석범 문학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재일조선인 중의 조선 국적을 가진 소수자의 존재가 지닌 역사적이고 적극적인 의의를 찾고 싶을 뿐인데, 이는 우선 확실히 다가오는 지금까지 없었던 현

실을 응시하는 일이기도 하다”⁵²라는 김석범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재일조선인 연구의 곤란은 곧 동아시아 현대사의 모순 그 자체에 자리해 있다. 따라서 김석범의 문학은 이런 곤란을 문학적 언어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디아스포라 서사를 넘어 동아시아 근대 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자 증언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여름』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또한 해방의 시점에 한반도 외부에 존재했던 조선인들 — 재일조선인은 물론 조선족, 고려인까지 — 이 냉전체제를 어떻게 경유하며 삶의 조건과 정체성을 형성했는가라는 보다 큰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들의 존재는 국민국가 중심의 해방 서사가 포착하지 못하는 경계적 위치에서 분단체제와 냉전 질서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5년 여름』은 재일조선인의 해방 경험을 민족적 귀환의 서사로 회수하지 않고, 제국의 유령적 잔존과 분단의 폭력 속에서 드러나는 균열된 주체의 목소리를 소환하면서 해방을 둘러싼 문제의 소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사상사적 과제임을 환기한다. 동시에 이 작품은 김석범이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을 직시하면서 제주4.3을 사건화하는 작업으로 연결하는 계기를 형성한다. 이로써 해방은 종료된 과거가 아니라 ‘누가 해방되었는가, 해방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전히 사유해야 할 과제를 던져 준다.

52 김석범(지), 이규슈(역), 『이회성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재일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실천문학》, 1999년 봄호, 332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조선일보》.

2. 논저

- 고은경, 「이념 구현과 정체성 탐구의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 78, 2019, 73~88쪽.
- 권성우, 「김석범의 火山島에 나타난 '친일' 비판의 의미」, 『국제한인문학』 19, 2017, 5~35쪽.
- 김계자, 「환기와 소거, 그리고 일본어문학」, 『한림일본학』 25, 2014, 165~185쪽.
- 김석범, 『1945년 여름』, 서울: 보고사, 2017.
- 김석범(강연), 사이키 가쓰히로(역), 「문학적 상상력과 보편성」, 『오늘의 문예비평』 124, 2022, 79~98쪽.
- 김지중(저), 윤여일(역), 『재일의 틈새에서』, 서울: 돌베개, 2017.
- 나카무라 일성(저), 정기문(역),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서울: 보고사, 2020.
- 미즈노 나오키·문경수(저), 한승동(역), 『재일조선인』, 서울: 삼천리, 2016.
- 신중훈, 「1945년 여름, 포츠담」,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38, 2016, 137~172쪽.
- 오구마 에이지(저), 한철호(역), 『일본이라는 나라』, 서울: 책과함께, 2009.
- 윤건차(저), 이지원(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서울: 문화과학사, 2003.
- 윤건차(저), 하중문·이애숙(역), 『일본-그 국가·민족·국민』, 서울: 일월서각, 1997.
- 이리에 아키라(저), 이성환(역), 『일본의 외교』, 서울: 푸른미디어, 2002.
- 이혜진, 「1945년 해방과 패전의 서사: 김남천과 김석범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9, 2018, 299~332쪽.
- 임성택, 「김석범 문학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 『일본어문학』 91, 2021, 233~248쪽.
- 전성규, 「거부당하는 주체로서 자기인식의 문제」, 『국제어문학』 95, 2022, 377~401쪽.
- 정근식·신주백(엮음),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파주: 선인, 2006.
- 조수일, 「재일조선인의 주체적 이동과 '8.15'의 자기서사」, 『한일민족문제연구』 38, 2020, 123~161쪽.
- 金太基, 「戦後、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年~1952年」, 一橋大學大学院 法學研究科博士論文, 1996, 1~852쪽.

外務省政務局特別資料課(編),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1945~1950』, 東京: 湖北社, 1978.

3. 기타

김석범(저), 이규슈(역), 「이회성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재일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실천문학》, 1999년 봄호, 318~335쪽.

「재일조선인은 해방국민 대우: 연합군사령부 대변인 담」, 《조선일보》, 1946년 11월 29일.

국문초록

이 글은 김석범의 『1945년 여름』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해방/패전 체험을 ‘해방의 시차’라는 틀로 재독한 것이다.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4.3 작가론이나 재일조선인 정체성 일반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한반도와 일본의 냉전 질서 재편과 텍스트 내부의 담화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이 글에서는 정책사·담론사·서사 기법을 통합하는 관점을 제안했다. 특히 GHQ 점령 정책의 이중성, 냉전 심화에 따른 역코스, 일본 정부와 언론 프레임이 결합해 재일조선인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불안정화한 과정을 정리했으며, 재일조선인 2세의 시점과 증언을 분석해 ‘해방=구원’ 도식을 비틀어 제국의 유령들이 현재의 기억 레짐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자이니치 협화회의 인물군과 일상에 내면화된 제국 권력의 작동을 추적함으로써 해방을 기억·귀속·배제의 정치로 재규정하고 개인의 균열과 전후 질서의 장치가 상호작용하며 청산되지 못한 폭력이 이어진다는 점을 논증했다. 이런 해석들은 텍스트 읽기를 정책/담론 맥락과 정밀하게 연동해 재일조선인의 존재 조건을 사상사적 과제로 재위치시키는 데서 선행연구를 넘어서는 기여를 제시하고자 했다.

투고일 2025. 10. 10.

심사일 2025. 11. 3.

게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김석범(Kim Seok-beom), 해방의 시차(disjuncture of liberation), 제국의 유령들(ghosts of empire), 재일조선인(Zainichi Koreans), 역코스(reverse course), 기억 레짐(memory regime)

Abstract

Ghosts of Empire: Disjunctures of Liberation in Kim Seok-beom's Summer 1945

Lee, Hyejin

This article rereads Zainichi Koreans' experiences of liberation and defeat through the lens of the "disjuncture of liberation," using Kim Seok-beom's *Summer 1945* as the core text. It argues that prior work—centered on "April 3" authorship and broad identity discourse—overlooks how early Cold War realignments in Japan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sect with the novel's internal discourse. Integrating policy history, discourse analysis, and narrative technique, the study shows how the double logic of GHQ occupation policy, the Cold War Reverse Course, and state/press framing destabilized Zainichi legal and social status. A close reading of a second-generation narrator's focalization and testimonial reliability unsettles the equation "liberation=redemption," revealing how ghosts of empire persist as a contemporary memory regime. Tracing internalized imperial power in the Kyōwakai cohort and everyday scenes, the article redefines liberation as the politics of memory, ascription, and exclusion, and demonstrates how personal fissures and postwar institutions interact to perpetuate unredressed violence—thereby repositioning Zainichi conditions as a problem in intellectual history.